

日本の 경제관리 방식에 관한 연구

金 文 瑄*

目 次

- I. 서 론
- II. 공급과 소득의 관리방식
- III. 생산요소 시장의 운영방식
- IV. 결 론

I. 서 론

80년대까지 성장을 거듭하던 일본경제가 90년대에 들어와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금융기관은 불량채권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경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에 의해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 그리고 95년도에 들어와서는 급격한 엔고로 인하여 국내 투자 및 소비는 증가하지 않고,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량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엔고에 따른 환율변동에 의한 것이어서 한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며 대동아공영권이라는 美名下에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패전하게 되자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구미제국을 따라잡는 것이었고, 전략은 수출지향적이면서 one set경제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패전 후 국제적인 정치 경제환경은 일본의 경제건설에 대단히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태평양전쟁에 패한 일본의 경제는 거의 괴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비극인 6.25는 일본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남북전쟁은 3년이나 계속되었고 그 동안 투입된 물량은 엄청난 것이어서 마케팅이론의 발전을 저해할 정도였다. 이때 투입된 물량중 일본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자는 일본이 생산하고 구입은 미국이 해 주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산업시설을 복구할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貿易學科 教授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일본은 불경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오늘과 달리 세계무역환경은 자유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는 별저항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월남전 특수로 호경기를 구가했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도 자유로운 시기어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는데 별어려움이 없었다. 여기에 자신을 얻은 일본은 구미제국을 따라잡자는 명치유신 이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층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식 경제관리방식을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의 경제대국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공은 일본식 경제관리방식에 힘입은바 크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본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戰後에서부터 70년대 말까지 일본의 경제관리방식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왜 그것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II. 공급과 소득의 관리방식

1. 고도성장의 실현과정

일본은 패전 후 일대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즉, 재벌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조건하에 신흥자본의 성장기반을 만들었으며, 농지개혁과 노동개혁은 그후의 대량소비를 위한 소득분배를 가능하게 했다.

이상과 같이 패전에 의하여 완성된 일본형 시장제도가 戰後의 고도성장을 실현했으며, 이러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일본형 시장제도가 갖는 高度의 상황적응성과 또한 구조개혁 유도정책에 의한 공급관리와 소득관리에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전후의 일본경제는 한국동란에 의한 特需로 해서, 전후부흥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 그리고 外貨의 초기축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55년까지는 기본적인 필수재인 식량확보를 위한 농업, 방직, 직물 등 섬유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尾崎巖氏の 실증에 의하면¹⁾ 일본의 산업구조는 1956년경부터 중화학공업을 시작하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화학공업이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대용량 처리형의 소재산업, 대규모조립생산형의 자본재생산등 기초 중간재 부문에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철강, 화학약품,

1) 尾崎巖：『日本産業構造の 分析—理論と實證』，李刊 現代經濟29號，1977

화학합성품, 조선, 자동차, 전기기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투자확대를 유도한 것은 산업기반정비를 위한 대규모적인 국토개발계획이었다. 즉, 고도성장의 起動力은 중화학공업에로의 급격한 산업구조변화를 가져오게 한 민간투자의 급속한 성장이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계획과 이에 기초한 경제계획에 의한 정부의 유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다.

「1955년에서 1970년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국민총생산, 민간설비투자,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10.1%, 16%, 8.8%였으며, 이는 다른 공업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증가율이었다. 또한 이 기간 노동생산성증가, 생산지수의 신장도 눈부신 것이었으며,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업, 건설업의 신장율이 특히 높았다.」²⁾

이와 같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민간투자였는데,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금융완화, 세계상의 우대, 일본은행을 중심으로한 자금공급의 확대였다. 높은 개인저축율도 민간투자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업설비의 계획과 생산기술은 제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이를 통합 개량함으로써 효율적인 최신예의 설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도마」의 「투자이중성론」³⁾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투자설비는 그 절대량으로서 공급능력을 확대 시킬과 동시에 그 상대적 증가분에 의하여 새로운 거래와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의 성장을 가져온다. 이는 소비를 확대시키며 소비의 확대가 유발적 투자를 가속화시킨다는 「체인즈」파의 성장 「모델」에 따라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은 진행되었다.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는데 제약조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원, 에너지, 식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을 지상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제수지의 제약과, 국내적으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과 재래형 중소기업의 존재가 그것이었다.

국제수지의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진행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성장과정에서 민간투자가 지나쳐 경기가 과열되어 국제수지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긴축금융정책을 채택하고,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 금융재정정책을 완화해가면서 근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업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근대화를 계속한다면 국제수지는 절대적인 제약조건은 될 수 없다.

2) 磯村隆文：日本型市場經濟，日本評論社，1982，pp.96-97

3) Evsey Domar："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1957，pp.97-100

문제는 국내의 중소기업, 농업, 유통기구 등 비근대적 부문이다. 이러한 부문을 중화학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省力型 대규모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어 합리화 효율화는 이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과잉노동력은 필연적으로 실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경제「시스템」으로서의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실업자 증가라는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근대적 부문의 존재가 근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전근대적 부문을 근대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근대적 부문이야말로 기득권 옹호를 위한 정치적 압력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근대화와 모순되는 보호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때문에 산업구조고도화 노선은 국제경쟁적 강화의 방향과 이것과 모순되는 전근대적 부문을 온존시키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 온존정책은 고도성장에 적합한 것으로 되었다. 전근대부문에 대한 온존정책은 실업증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고도성장은 이들 전근대 부문의 양적 확대의 조건을 제공했다.

농업부문으로부터 노동력이 유출되어 이것이 개개의 농업경영에 노동생산성 향상을 강요해서 노동집약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하여 겸업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생겼다. 그리고 유출된 노동력은 도시의 근대 부문과 농업이외의 전근대 부문에 흡수되었다.

이들 전근대 부문은 고도성장의 소득분배분의 비중을 높여 투자재와 더불어 내구소비재의 수요를 증대시켰다. 「농업의 경우에는 고미가정책의 식량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⁴⁾ 중소기업이나 유통기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대적 대기업 부문의 지배하에 있는 부문은 생산성 향상을 강요당하면서 성장을 계속했고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은 양적 확대에 힘입어 생산성 증가율은 낮기는 했지만 고도성장의 몫을 차지하여 수요증대에 기여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근대노선과 이것과 모순되는 전근대적 부문의 보호온존노선은 두 부문간의 소득격차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2. 정책선택의 전제조건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은 눈부신 것이었다. 고도성장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경로 선택

4) 磯村隆文：日本の物價構造，日本評論社，1972，第10章참조

기초는 일본이 놓여있는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어졌다.

기후 풍토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역을 넘는 인구를 부양할 농지는 부족하고 근해의 수산 자원도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자원도 없었다. 전쟁에 의한 산업설비의 파괴와 노후화, 방대한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던 군대의 해체로 인해서 패전후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상대적인 과잉인구와 실업이었다. 이 상대적인 과잉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자원 식량의 수입자금을 마련하고, 실업자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력을 활용해서 가공형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당시의 선택이었다.

가공형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戰前에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선택의 실행을 제약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후개혁에 의해서 역사적인 일부의 제약은 제거되었다. 즉 군부의 해체에 의한 과대한 군사비 부담은 없어졌고 재벌해체로 해서 재벌의 독점적 지배도 배제되었다. 정치적으로도 긴장상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중시주의자라는 점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출진흥을 목표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직접적인 장애는 없었다.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개혁으로 소규모 경영의 자작능 중심이 된 농업, 영세중소기업, 생업적유통기구 등 재래전통형 산업의 이중구조적 격차였다.

만약 근대화 노선에만 집중했다면 전통형 산업은 괴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근대적 시장제도의 발전경로의 第2走者の 지위에 있었다. 명치유신 이래 선진 제국주의 나라로부터 자기 방위를 의식하면서, 선진제국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신흥제국주의 국가로서 독자의 지배권을 형성하려다 좌절했다.

그러나 패전후 일본은 오히려 경제발전의 第2走者로써 경제발전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에 있었다. 미국중심의 군사협력체제로 해서 군사비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그 여력을 민수용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선진제국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경제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선발국의 성과를 유리하게 도입하여 선발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1950년에는 본격적인 민간무역이 재개되었고, 1952년에는 국제통화기금, 1955년에는 GATT에 가입했지만 패전후 부흥을 위한 유치산업보호의 명목으로 수입제한과 외환관리를 함으로써 전략산업의 성장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戰前부터 행정주도의 산업육성 전통과 전시중의 통제경제의 타성도 있어서 전후의 행정주도형의 경제운영은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 들여졌다.

그 후의 고도성장과 안전성장으로의 전환에도 언제나 행정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일본 경제구조 진화의 특징이 있다. 歐美형 시장제도의 경우에는 시장제도의 운동의 결과로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되며 다만 정치 행정은 그 시장제도의 자율적 운동이 가져올 결함이나 실패를 보완하고

규제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일본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제도에 대해서 행정이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기업은 이윤추구의 자유가 인정되고 사유재산이 지켜지는 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의 간접적인 유도에도 적응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지도에도 따르는 관습이 있다. 행정쪽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하에 국민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경제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계약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력이다. 균등한 교육을 받고 패전후의 혼란한 가운데 사회적 평등성을 체험한 대량의 노동력의 존재는 그 활용을 위하여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될 법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에 충성심을 갖는 숙련노동자의 확보를 원했고 노동자 쪽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원했다. 이리하여 많은 노동자를 고정적인 종신고용제로 고용하는 관행이 前後에도 계속되었다.

종신고용제하에서는, 불황인 때는 해고를 극력 피하려 하고 호황인 때는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완충 역할을 하는 임시공제도가 있다. 그러나 基幹부문의 종신제고용직원 수가 적으면 기업의 성장시에 필요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종신고용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호불황의 순환 폭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장지향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자본축적이 불충분한 단계에서 한국전쟁 特需등에 의해서 수요선행형의 경제부흥을 진행 시킨 데다 소득배증계획 등 수요자극형의 고도성장을 추진한 일본 기업은 만성적인 자기자본 부족 상태에 있었다. 이 부족자금 조달은 주식시장에서 보다 주로 은행 차입에 의존했다. 그 결과 금융비용의 부담이 증대되었는데 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가 제일의 목표로 되어 이 또한 기업이 성장지향형의 체질을 갖게 되었다.

고도성장기에 들어와서도 타성적인 성장지향이 정착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일본기업의 고용과 자금조달에 대한 기본적체제가 성장지향형의 제도적 조건을 형성했다.

3. 공급관리정책의 전개

앞서 본 제도적인 제약조건 하에서 일본의 시장제도는 가공형의 수출산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재래형 산업을 보호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많은 근대화 기업은 체질적으로 성장지향성이 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당경쟁의 염려도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산업정책으로서 ①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 ② 전통형 산업의 보호존존,

③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독점금지법의 완화, ④ 잠재성장력의 실현이라는 정책방향이 선택되었다.

서구시장제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행정이 시장제도에 개입하기는 하지만 그 원칙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결합의 보정과 규제이며 수요관리 정책에 의해서 정책대상은 앞서의 ②와 ④이다. 그러나 ①과 ③과 같이 공급측면을 직접 관리하는 일본형 시장제도의 역사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정책이다. 전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부흥과 그 후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공수출산업으로서 전략산업을 선정한 기준은 전후의 세계경제의 동향과 일본의 주체적 조건이었다. 따라서 그 제품은 일본이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또한 국제적인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자유거래 상품이어야 했다.

일본의 풍부한 노동력을 고려한다면 노동집약형 부문의 비교우위상품의 특화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집약형 상품의 수요량으로서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자원수입을 위한 외화를 획득할 수 없다고 예견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수출상품으로서 고부가치이면서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 대량판매가 가능하며,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화획득이 용이한 산업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기술집약적 부문이라면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대담한 혁신투자를 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철강,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기계, 전기전자기기 부문 등이 전략산업으로써 선정되었다.

이러한 전략산업의 선정은 시장제도의 자율적 조정이나 민간기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산성의 주도로 이루어졌다」⁵⁾ 이러한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일본 시장제도의 특색이 있다.

이들 전략산업의 육성 방식은 ① 이들 전략산업의 육성계획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고, ② 금융기관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확립하고, ③ 이들 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외화할당에 의한 수입제한, 보호관세, 외화규제, 외국기술도입통제, 차별적 물품세 등 비관세 장벽에 의해서 보호함과 동시에 저리융자, 보조금 교부, 조세특별조치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육성책」⁶⁾을 강구하는 것이다.

일본형 시장제도에서 행정이 하는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민적 승인의 형성이다. 일본의 경제계획은 대단히 유연한 유도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소득정책 방식보다 훨씬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다.

5) 上野裕也; 日本の經濟制度, 日本經濟新聞社, 1977, p. 11

6) 上野裕也; 前掲書, p. 11

일본의 「경제계획」은 경제기획청이 중심이 되어 기간중의 경제성장률, 국민경제의 구성요소의 변화, 국제수지, 물가 등의 추계치를 작성하고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재정지출의 규모 등을 결정하여 공표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자체는 법률적 구속력도 없고 추계치도 단지 목표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의 달성여부에 대해서도 내각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계획의 공표자체가 국민적 합의라는 효과를 가지며 경제 시스템의 현실적인 행동목표로 받아들여진다.

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즉 「각 주무관청간의 조정작업이 있고 이와 병행해서 관련조직 집단간의 이해조정과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은 각계 대표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경제심의회」의 심의에서 승인되면 이를 답신 안으로 閣議에 제출하면 각의에서 결정된다.」⁷⁾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경제계획은 한번 언론에 공표되면 여러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각 경제주체, 특히 기업가나 노동조합간부를 포함한 중간계층은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인다.

「계획」이 결정되면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정지원을 해가면서 계획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조치를 해서 육성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가면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보조금교부 조세특별조치 등의 재정수단과 저리자금의 선별적 배분을 위해 강력한 금융수단이 동원된다. 기술에 대해서도 우대조치를 해서 전략산업은 말 그대로 「엘리트」양성형의 보호와 육성을 받게 된다. 이 전략산업 육성방식이 공급관리 정책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합리화를 진척시켜, 생산력의 増進을 이룩하여 고도성장의 실현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성과를 얻은 것이 일본시장기구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4. 소득관리 정책의 침투

전략산업 육성에 의한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은 일본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약한 농업이나 생업적 유통업을 소홀히 하여 노동집약형 전통형의 산업부문이 붕괴되어 고용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전략산업 육성의 전반기인 1950년대에는 근대화 부문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한편 전통부문에는 성장자금 대신 보호적인 보호금제도에 의한 제도와 조건을 개선했다. 전통산업 부문이라 해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농업에 대한 기반정비와 보호가 중심이 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제도의 정비라는 재정정책적인 것이었다.」⁸⁾

7) 磯村隆文：日本型市場經濟，日本評論社，1982，p.108

8) 林雄二郎編：日本の經濟計劃，東洋經濟新報社，1975，p.343

고도 성장기인 1960년대는 전략산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자극하는 대형국토개발계획이 견인차가 되어 국내수요의 급팽창에 의해서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연대였다. 이러한 국민소득의 성장은 소비 투자 주택건설 공공사업 등 국내수요의 증대를 지탱케 했던 자원 에너지를 전략산업의 수출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통형 산업은 국내수요의 확대에 의하여 소득분배의 몫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각 부문의 소득증가는 시장기구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된 경우와 쌀값 등 政策的的支持에 의해 실현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는 고도성장에 의한 소득배분의 증가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의 전체적 증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외국의 값싼 상품의 수입을 직접적인 수입제한이나 비과세장벽 및 외환관리에 의하여 억제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했고, 또한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 전통적 부문에 대해서는 기반정비나 경영개선 등 支持的政策을 통하여 경영기반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수요증대를 배경으로 가격인상을 쉽게 하는 환경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일본은 전략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해서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⁹⁾

고도 성장기의 소득분배를 보면, 노동력부족 상태를 배경으로 노동자의 분배분도 증가했다. 고도성장기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증대가 전체적인 노동력 부족 상태를 초래하여, 중소기업 등 전통형 부문에도 젊은 노동력 공급에도 애로가 생겼다. 한편, 수요증가로 매상고가 증가하고 채산성이 개선된 대기업에서는 젊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일반 노동자의 소득수준 향상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우량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규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본시장비용 생산기술 개발능력의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였다.」¹⁰⁾ 이러한 저생산성 상태에서 대기업의 임금상승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임금비율을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소등성장에는 의한 수요증대의 환경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전략산업의 육성과 전통형 산업의 보호라는 경제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부문에 자본을 집중해서 규모의 확대를 용이하게 하고, 과당경쟁에 의한 비효율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완화를 필요로 했으며, 그러나 전통형 산업에 대해서는 근대화화 합리화를 구실로 해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독점금지법의 완화는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상태와 더불어 가격경쟁을 회피하게 해서 생산성 향상 부문의 가격下方경직화와 저생산성 부문의 임금비용과 이윤증대를 가격전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9) 磯村降文；前掲書， pp. 111-112

10) 通産省編；産業構造の長期ビジョン， 1975， p. 273

고도성장은 근대적 대기업과 전통형 중소기업과의 이중구조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기업규모, 경영효율, 경쟁력 등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용자의 고용조건 노동조건 격차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해소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중구조 하에서도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고 소비수준도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이리하여 중소기업경영자, 농어업자, 유통업자로서의 중소기업자층은 산업보호정책의 혜택과 고도성장에 의한 대폭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세계상의 우대를 받아 새로운 중간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수파를 형성하게 된 중간계층이 전통적 가치관의 일부를 계승해서 경쟁회피에 의한 기득권 옹호와 정치 경제적 안정을 원했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단체를 형성하게 된 모태가 되었다.

Ⅲ. 생산요소시장의 운영방식

1. 노동시장의 특성

잠재적인 성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애로나 장애를 제거해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 方策이라 할 수 있다. 시장제도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긴다면 자본부족 상태에서는 시중금리가 급상승하고 노동부족 상태에서는 임금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의 취득이나 기술의 수입에 있어서도 시장제도의 자유로운 거래에 맡기면 地價나 특허료의 앙등과 시행착오적인 구입으로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양적 부족과 가격 등위가 경제성장을 제약하게 되면 잠재적 생산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제성장율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이러한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제약조건을 회피케하는 사회「시스템」의 자율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정치 행정시스템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유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가치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의 본연의 자세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적합했다.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장에서는 행정「시스템」이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적합하게 되었다. 토지시장은 최악의 비효율적이었는데 노동시장은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이 歐美型시장과 다른 점은 시장구조가 직능별 횡단시장이라기 보다는 산업별 기업별의 다층구조로 분할되어 있으며, 더욱이 그것은 신규졸업예정자의 신규채용, 중도채용, 정년후 재채용이라는 3단계의 수급국면에 재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동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채용이라는 형태로 기취업자의 이동이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시장의 특징은 고용조건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본다면 신규졸업예정자는 신규채용하는 기회에 우량한 대기업에 입사해서 거기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임금특징은 ① 근속평가가 높다는 것, ② 연령별에 대한 평가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특히 사무적인 경우는 더욱 높다. ③ 그러기 때문에 직종별 격차보다도 성별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더해서 '대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조건이나 후생제도가 좋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서열 따라 종신고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을 선호한다.

중도 채용자의 경우에는 일부의 전문직 관리직 숙련기술자를 제외하면 조건이 좋은 기업에 갔다해도 동일기업내의 종신고용자보다 임금수준이 낮다가, 현금급여는 많다 하더라도 노동조건이나 후생면에서는 불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은 대단히 중요한 선택기회라 할 수 있다.

2. 노동수급관계의 특성

신규 졸업자 시장의 공급자측은 앞서 말한 다층적 조건 격차 때문에 정년보장을 전제로 해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에 임금수준 노동조건 고용의 안정성 뿐 아니라 사회적 知名度도 선택기준에 포함된다. 그러기 때문에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 대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성장률이 높고 장래성이 기대되는 성장선도형 산업인 대기업에 취직희망자가 집중된다.

취직 응모자가 많은 買主시장에는 노동능력이나 기업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충성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선별 채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학력수준 출신학교 연령제한 등에 의한 제1차 선택과 학벌에 의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선별 채용하는 방식이 있다. 인간관계에 의한 채용은 단지 노동능력의 매매계약이라기 보다는 기업조직에 전인격적인 참가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채용된 노동자는 각각 직종 직능에 알맞은 교육훈련을 받아 종신고용을 보장받게 되어 개인의 기업에의 일체화가 완성된다.

기업에서의 능력평가는 단기적인 업적 평가 뿐 아니라 장기적인 조직에 대한 공헌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령과 근속년수에 가중치를 두는 일본 특유의 평가방식을 택한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에 자기자신을 기업에 적합시키는 개인일수록 높이 평가되며, 단기적인 업적을 올렸다하더라도 기업에 적합시킬 수 없는 개인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채용 평가 방식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널리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중심적인 관리직

후보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졸업자 시장에서는 학력단계마다 출신학교의 순위에 따라 선별되어지는데 지명도가 높고 성장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고학력 유명학교 출신자를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선택기준은 하향적일 수밖에 없다.

「전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진학률이 높아져 이른바 고학력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중학졸업자는 감소하고 대학졸업자는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고학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학력자일수록 대규모기업에 집중되고 저학력자도 대기업이 필요한 수만큼 충족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분산되는 상황이 정착되었다.」¹¹⁾

신규졸업자로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형편이나, 경영상의 사정, 본인의 책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직하기도 한다. 이들 이직자는 중도채용자시장에 유입되어 일부는 어딘가에 정착하지만 대부분은 유동화 된다. 이들 이직자는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전통부문의 노동력으로서 유동화되어 이들중 하청기업에 유입된 노동자는 대기업의 임시공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고도성장기에는 유동시장에서도 노동력부족 상태가 일어나 대기업으로의 노동력 유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임금수준의 高位평준화의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안정성장기인 1975년부터는 감량경영으로 해서 종신고용 부문의 삭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주로 中高年층의 이직자가 증가하고 중도채용자의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에 유동시장에서의 고용조건이 악화되어 中高年층의 재취직 기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집중되는 신규졸업자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지만 조건이 나쁜 중도채용자 시장에서는 공급과잉 상태가 되어 두 시장간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졌는데, 이것은 오늘날 일본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금융시장의 國策型 편성

戰前의 금융시장은 「殖産興業」, 「富國強兵」을 위한 정부주도의 산업육성에 대응하는 특수은행과 시장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설립된 보통 은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前後의 금융개혁에서는 민간은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해서 은행예금을 자금원으로 해서 단기금융을 하고 장기자금의 공급은 증권시장의 육성에 의한다는 방향설정에 따라 특수은행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대규모 은행인 都市은행이 13개, 지방은행 63개, 장기신용은행으로서는 일본흥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부동산은행 등 3개, 신탁은행은 7개로서 이들이 자금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중소기업 금융기관, 농림중앙금고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등의 농림수산 금융기관, 증권금융기

11) 磯村隆文 : 前掲書, p. 120

관, 보험회사 등 민간금융기관은 세분화되어 다층적인 제도로 편성되어 금융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前後 부흥을 위한 자금배분기구로서 戰前의 특수은행 대신에 직접적인 정책금융을 하는 정부 금융기관이 설립되었다. 주요한 기관으로서는 일본개발은행, 일본수출입은행, 국민금융公庫, 주택 금융공고, 중소기업 금융공고, 농림어업 금융공고, 北海道東北개발공고, 공영기업 금융공고, 중소기업 신용보험공고, 의료금융공고, 환경위생 금융공고, 오키나와·친흥개발 금융공고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정책금융을 하고 있다.

이들 정부금융기관은 민간금융기관이 공급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관계, 산업기반관계 및 수출진흥관계 그리고 기간산업에 융자하고 있다.

일본개발은행은 전기, 운수, 광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등의 설비자금을 공급해서 기간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일본 수출입 은행은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그 필요성이 증대된 연불수출 금융을 담당했는데 이들 두 은행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민간 자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농림어업, 주택건설 등의 부문에 대한 자금배분은 사회정책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간부문에서 부족한 자금은 정부금융기관이 직간접적인 자금 배분을 통하여 충당되었으며 그래도 모자란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통화창출에 의해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했다.」¹²⁾

4. 통화관리의 상황적 적합성

통화는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결재를 위하여 유통 회전한다. 이러한 회전운동에 의해서 통화잔고의 數倍의 소득형성을 실현한다. 근대적 신용제도 하에서 화폐의 가치는 예금이라는 형태로 보존된다. 말하자면 금융기관이 이들 예금을 운용한다. 이 예금운용의 과정에서는 현금통화로서 뿐 아니라 요구불 예금의 구좌결제를 위한 수표나 대체지불등의 신용거래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용거래의 과정에서 일정액의 현금통화는 예금이나 대출잔고를 원래 잔고의 몇 배로 팽창된다.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관찰한다면 일정액의 일본은행권 발행고, 이것의 數倍가 되는 예금통화잔고, 이것보다도 더많은 정기성 예금잔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으로 제공된다.

특히 현금통화가 신용제도를 매개로 한 회전에 의해서 예금통화나 정기성 예금잔고를 팽창시켜 상업은행의 신용공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신용창조라고 하는데 이는 일본은행의 통화창출과는

12) 磯村隆文; 前掲書, p. 128

그 성격이 다르다. 일반금융기관은 현금통화의 유통회전이라는 소득형성 과정에서 집적된 예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뿐 통화 그 자체를 창조하지는 않는다. 發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일본은행 뿐이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통화발행고는 전체적인 통화공급량에 비하면 적다하더라도 그것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고도성장기인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말까지의 기간에 법인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자금부족을 증가된 개인저축으로 충당할 수 없어 일본은행의 통화창출에 의해서 충당되었다. 고도성장기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日銀대출에 의하여 전락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자금분배가 이루어 졌으며, 우량기업은 그때까지 자본축적을 기반으로 한 감량경영이 진행되어 차입금 의존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고도성장추진 정책의 마무리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 환경보호, 전통산업 부문의 보호 등의 재정지출과 생산능력 거대화에 따른 경기대책 지출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은행의 통화창출에 크게 의존하였다. 결론적으로 前後에서 70년대 말까지 일본의 통화정책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³⁾

5. 자금배분의 효율성

國策實現을 위하여 자금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저금리정책이었다.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자금부족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금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예금금리를 통제하는 임시금리조정법을 1947년에 제정했다.

예금금리의 통제는 상업은행이 경쟁적인 금리인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은행경영을 보증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저금리정책은 금리통제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인율 조작에 의해서 관철되었다. 소득배중계획의 발표와 더불어 공정한인율을 인하여 예금금리, 대출금리의 최고한도를 인하시켰다. 또한 수출무역어음에 대한 일본은행 할인율이 우대적인 저리로 되자 수출 촉진적인 우대금리라든가 정책금융을 포함한 제반 우대 조치가 강화되었다.

전반적인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긴급금융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은행이 대출함에 있어 일정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했으며, 대출량을 직접규제하기 위한 창구 규제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들은 모두 유효한 기능을 수행했다. 이와 같이 경기 순환적인 금융정책 수단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적으로는 낮은 예금금리를 축으로 해서 대출금리를 억제하여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을 공급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과다대출 기업은 과다차입이라는 불건전한 상황이 되었지만,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에서는 일본은행이 특별우자를 해서 구제해 주는 支持方式으로 저리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금은 주로 수출촉

13) 磯村隆文：前掲書， pp. 132-133

진을 위한 전략산업 부문에는 민간 都市은행이 공급했다.

정부계 금융기관중 일본개발은행은 장기적인 설비투자 자금의 우대적인 할당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개발은행의 자금배분 방식은 그 자체가 國策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침은 일본흥업은행을 비롯한 장기신용은행의 대부방침에 영향을 주며, 앞서 말한 都市은행의 대부방침도 대개 이에 따르게 된다.

자금배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 농업, 유통업, 환경위생법 관련업 등 전통형산업부문은 각각 압력단체 조직을 통하여 정부계금융기관(公庫 金庫 등)을 설립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의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것이 거대한 투자자금을 뒷받침했는데,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에 의하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 자금배분에 있어서는 日銀에 의한 통화창출을 기반으로한 「오버 론」을 전략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했다는 것, 정책금융체계가 자금배분을 주도했다는 것, 이것이 일본 금융시장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정책은 안정성장기에 들어서면서 고도성장을 자극한다는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대량으로 발행된 국채의 발행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했다.

6.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토지이용에 대한 정치 행정의 개입방법은 실패작이라 할 수 있다. 점령군에 의한 前後개혁이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자유시장체제의 방향으로 결정되었고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권은 절대시되어, 농지법에 의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는 자유방임되는 결과를 낳았다.

농지해방의 경위에서 본다면 농지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소작권을 내세워 부재지주의 토지를 공짜나 다름없이 취득했기 때문에 간단히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권 이전이나 이용권의 설정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법률제정 당시로서는 당연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가로막고, 도시근교의 주택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용지공급을 제한하게 되어 농업경영근대화를 방해하고 지가등귀의 원인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규매립이나 조성을 통하여 산업기반 육성의 기능을 한 면도 없지 않다.

토지조성비 보다 헐값으로 팔거나 저리의 용자나 장기할부제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세 면제의 특전을 주어가면서 공장유치를 했기 때문에 공업용지 공급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말한 부분적 규제를 제외하면 토지거래는 자유롭게 방치되어 있어, 지가는 등귀하

였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언제나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거래를 하는데 유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공적자금에 의한 개발이익을 관련지주가 지가등귀라는 형태로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의 買主는 장기간「론」을 지불하게 되어 부의 분배의 왜곡을 낳았다.

도시근교의 넓은 공지가 방치되어 이용되지 않고, 기업도 토지를 투기대상으로 하여 매입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확대를 가로막는 현실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일본은 패전후 경제재건 및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라기 보다는 관리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국내시장을 관세, 비관세장벽, 외환관리 등을 통하여 폐쇄화하면서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수출 전략적인 산업은 대량생산 대량수출지향적이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철강생산은 세계 제일이 되어 세계시장을 주도하였고, 조선건조능력 및 수주량에서도 세계 제일이 되었다. 석유화학도 세계 제일의 「콤비나트」를 보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텔레비전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생산도 그러하였다. 이러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대량수출을 함으로써 무역마찰을 일으키면서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80년대에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자동차, 비디오, 카메라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대량으로 수출하던 상품들이 세계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세계시장에서 대량으로 수요하는 상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또하나의 요인은 one set 경제를 지향하여 모든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정책이다.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수입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낳게 되었다. 이는「엔」화절상을 가져왔고, 이는 국제경쟁력 약화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본은 현재 산업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고용제도의 특징이며 장점이라고 자랑하던 종신고용 연공서열제도도 무너지고 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제도가 유지되려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1%내외의 경제성장하에서는 이러한 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일본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될는지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시장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정책을 채택한 일본은 일단 세계경제대국이 되는데는 성공했지만 90년대 들어와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길밖에 없으리라 본다.